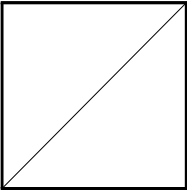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356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11. 29. (제 21차)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 원 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3. 11. 29.

1. 의결주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금융투자상품 취급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 의무를 소홀히 한 임직원에게 대하여 ‘감봉’~ ‘견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등으로 조치요구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제43조(과태료) 제1항
-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감독)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별표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제19조(직원에게 대한 제재),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3], [별표6]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다. 관계부서 협의

- 제5차 제재심의위원회(2021.2.5.) 심의필
- 제21차 안전검토소위원회(2023.11.23.) : 심의필

<별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중소기업은행 : 기관경고* 및 과태료 5천만원 부과

*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2022.2.23. 既 통보한 제재조치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별도 조치는 생략

- 조치사유(과태료) : 금융투자상품 취급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0.5억원
- 법적근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별표2]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20조, [별표3], [별표6]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前 은행장 ■■■■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적 경고 상당)”로 조치

- 조치사유 : 금융투자상품 취급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前 부행장 ◆◆◆, 前 부행장 ★★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감봉3월 상당)”으로 조치

- 조치사유 : 금융투자상품 취급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본부장 ◆◆◆, 부장 ●●●에 대하여 “견책*”으로 조치

*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2022.2.23. 既 통보한 제재조치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별도 조치는 생략

- 조치사유 : 금융투자상품 취급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관련 직원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장에게 통보하여 조치대상자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조치
- 조치사유 : 금융투자상품 취급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법적근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조, 제19조

2. 조치사유

- ☐ 지배구조법 제24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에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 절차에 대한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 20xx년 4개(◆◆, ■■■■, ☆☆☆, ◎◎◎◎) → 20xx년 11개 → 20xx년 18개

* 180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총 xxx명에 대해 판매한 ■■■■■펀드 xxx건 (xxx.x억원), △△△△△펀드 xx건(xxx.x억원)과 ○○○○신탁 xxx건 (xxx.x억원)은 현재 환매유예 중임

(1) 자산운용사 선정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 ♥♥♥♥♥부는 사모펀드 상품 도입 시 투자자산의 처분, 취득 등을 결정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준수 장치, 전문성, 운용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 ▲▲▲▲▲자산운용(주)이 20xx.x.xx.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는 등 자산운용 업력이 없는 상황에서 동 운용사의 자산운용 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 없이 20xx.x.xx. 사모펀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

(2) 금융투자상품 선정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가) 사모펀드 상품 심사 기준 및 절차 미마련

- ♥♥♥♥♥부는 사모펀드 상품 판매 결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상품의 투자 구조 및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연체율, 부실률 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음*

* ♥♥♥♥♥부는 20xx.xx.xx.부터 “PB전용상품 선정 및 사후관리협의회 운영기준”을 부서장 결재의 일반문서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부의 법률검토 의견에 의하면 해당 일반문서는 은행 내부에서 계속적 구속력을 갖는 “내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동 기준에는 신상품의 범위, 상품의 투자구조 등에 대한 평가항목이 없으며, 리스크 관리, 준법, 소비자보호 담당 등 관련부서의 신상품 도입에 따른 각종 리스크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항목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핵심적인 내부통제원리인 견제와 균형 등이 작동할 수 없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

- 이로 인해 20xx.x.xx. “♠ ♠ ♠ ♠ ♠ ♣♣♣♣ ♦♦ 펀드*(♦♦ ☆☆☆ ☆☆☆ Fund Linked ○○○○)(이하 ‘▲▲▲▲연계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면서 20xx.x.xx. ♦♦♦♦♦부가 동 펀드의 투자구조 및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연체율 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자산운용(주)에 자료를 요청하여 추가적인 리스크 검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20xx.x.xx.부터 동 펀드의 판매를 개시하였고

* ♠ 자산운용사인 ☆☆☆의 대표펀드인 ▲▲▲▲ 펀드의 수익률에 연동되는 DLS에 투자하는 형태

- 또한, 20xx.x.xx.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면서 동 펀드의 투자 구조가 20xx.x.xx.부터 판매한 ▲▲▲▲연계펀드의 투자구조와 다른 새로운 형태로 변경*되었음에도 새로운 투자구조 및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 정보 등에 대한 별도의 리스크 검토 없이 총 x차례에 걸쳐 판매를 결정하였음

* 20xx.x월 최초 도입시에는 ♠ ◇◇◇ 운용사가 운용중인 ▲▲▲▲ 펀드의 수익률에 연동되는 DLS를 기초자산으로 펀드(▲▲▲▲연계펀드)로 운영하였으나, 20xx.x월 부터 ☆☆☆ ●●●가 ♠ ◆◆◆대출 ★★☆☆ 업체가 중개한 ‘☆☆ ◆◆◆대출채권’을 투자대상자산으로 발행한 (선순위)사모사채(note)에 투자하는 형태로 변경

(나) 신탁 상품 심사 기준 및 절차 미마련

- ●●●부는 신탁 상품 판매 결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상품의 투자구조 및 운용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음*

* ●●●부는 “신탁상품 선정협의회 운영기준”을 소관 그룹장 결재의 일반문서 형태로 마련·운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행 ☆☆☆☆부의 법률검토 의견에 의하면 해당 일반문서는 은행 내부에서 계속적 구속력을 갖는 “내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동 운영기준에는 동 협의회 위원이 ●●●부 소속 직원들만으로 구성되도록 하는 등 리스크, 준법, 소비자보호 담당 유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없고, 신탁 재산의 운용방법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정량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도록 운영하여 핵심적인 내부통제 원리인 견제와 균형 등이 작동할 수 없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

- 이로 인해 20xx.x.xx. ◎◎◎◎신탁의 판매를 결정하면서 별도의 정량 평가 절차 없이 단순히 평가위원들의 ‘가/부’로만 판매를 결정하는 등 상품 심사를 형식적으로 수행하였음

(3) 공동관리제도 운영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 ♥♥♥♥♥부는 20xx년부터 WM센터와 일반영업점이 연계하여 금융투자 상품 등을 판매하는 “공동관리 판매 프로세스”(이하 ‘공동관리제도’)를 핵심 영업 전략으로 도입하여

* 영업점에서 WM/PB센터로 고객을 소개하면 WM/PB센터에서 투자성향 분석 등 가입서류 작성 및 계좌개설을 수행한 후 그 실적을 WM/PB센터와 일반영업점에 각각 100%씩 인정하는 판매 제도

- ♥♥센터에서만 판매 가능한 “PB전용상품_○○○○○○”(■■■■■■펀드, △△△△△△△△펀드도 이에 해당)을 공동관리제도를 이용하여 판매 하면서 WM센터와 일반영업점 간 이원화된 업무처리 방식*으로 인해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음

* PB전용상품_○○○○○○의 경우 “투자자성향 분석” 및 “계좌신규 개설” 등 전산 시스템 입력(key-in)은 WM센터만 가능한데, 일반영업점 직원이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서 고객의 투자자성향(점수, 등급)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를 WM센터에 방문하도록 안내하여 “투자자성향 분석” 등 절차를 거치게 한 후 판매되었어야 함

< 관련법규 >

「지배구조법」 제24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제13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제4호

<별표2> 제1호, 제6호

관 계 법 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2. 위법행위의 중지명령
3. 금융회사에 대한 경고
4. 금융회사에 대한 주의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회사에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별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34조 및 제35조 관련)

25.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 포함)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5.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확인사항·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별표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6.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0. 금융회사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업무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업무 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의 장에게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퇴직한 중소기업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중소기업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은행의 장은 이를 퇴직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3조의3,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9호,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69조제1항 제2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와 「한국은행법」 제56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금융위설치법 제37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검사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위설치법 및 금융업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검사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감독원", "감독원장" 및 "금융감독원"은 각각 "금융위"로 본다.

③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결과 등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검사를 위탁한 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제3호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정지조치 또는 제4호의 위법·부당행위의 중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점营业을 계속하거나 당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라. 제7호의 기관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 하여야 하며,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금융업 관련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에서 같다.)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 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①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제재 또는 임직원 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3. 감봉

-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 5. 자진신고,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제50조(직원제재의 감면)

② 제재대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5에 정하는 "제재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제재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제재양정의 감경은 1회에 한하며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금융 관련 범죄와 제45조 제1항 제5호의 "주의"조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금융위위원장, 감독원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표창을 받은 공적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양정을 감경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공적은 제외한다.
1. 제재대상 직원이 "주의"조치 이외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제재 이전의 공적
 2. 제재대상 직원이 소속 금융기관 입사전에 받은 공적
 3. 검사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이내에 받은 것이 아닌 공적
 4. 금융업무와 관련 없는 공적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게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 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별표2> 제재양정기준

유 형 \ 위법·부당의 정도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거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 처분, 지시등의 위반	해임권고(면직)	해임권고(면직) ~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	해임권고(면직) ~ 직무정지(정직)	문책경고(감봉) ~ 주의적경고(견책)
당해 금융기관에 금전적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해임권고(면직) ~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당해금융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를 위반하거나 충실의무의 위반	"	"	"
직무태만	"	직무정지(정직) ~ 문책경고(감봉)	"
기타 위법	"	"	"

<별표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Ⅲ. 금융투자부문

Ⅲ-5.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1. 제재대상

① (유형 1) 적합성 원칙 위반 (자본시장법 제46조)

-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일반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유형 2) 설명의무 불이행 (자본시장법 제47조, 「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

-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하는 행위
- 설명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④ (유형 4)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51조, 제71조제5호)

-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 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2. 제재기준

- 불완전하게 판매된 금액 또는 건수 기준 중 중한 기준으로 제재
- 기관제재시 투자권유대행인의 판매분을 포함 (투자권유대행인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 가능)

구분	판매금액·건수	제재양정		
		유형 1, 2	유형 3	유형 4
임직원	10억원 또는 50건 이상	문책경고 (감봉) 이상	직무정지 (정직) 이상	문책경고 (감봉) 이상
	1억원 또는 5건 이상	주의적경고 (견책) 이하	문책경고 (감봉)	주의적경고 (견책) 이하
	1억원 또는 5건 미만	주 의	주의적경고 (견책) 이하	주 의
기관	100억원 또는 500건 이상	기관경고 이상	기관경고 이상	기관경고 이상
	50억원 또는 250건 이상	기관주의	기관주의	기관주의

주) 적립식으로 매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판매금액은 총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3. 가중 및 감경

- 투자자 수, 손실규모, 금융투자상품 규모, 위반기간, 회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위법 판매행위가 경영방침·판매지시, 기관차원의 부당한 광고 및 자료 등에 기인한 경우, 기관 및 관련 행위자(광고문안 작성자 등) 등에 대해 조치하고 판매임직원에게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미친 영향, 위법행위의 정도와 동기 등을 감안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불완전판매행위 방지를 위해 자체감사 및 교육, 내부 통제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관에 대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기관에 대하여는 제재유형별 건수 및 금액을 합산하여 제재할 수 있다.
- 서로 관련 없는 다른 판매행위가 여러 제재유형에 해당되어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기준에 해당하는 조치보다 가중할 수 있다.
- 동일한 판매행위가 여러 제재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 투자설명서를 미교부 하였더라도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설명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 단순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조직적·반복적인 불완전 판매행위 또는 제재대상 유형 1, 2, 4의 경우 고위험 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마목 (1)~(5)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가중할 수 있다.
- 투자자 손실 발생이 없는 경우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정책과	은행검사2국
연락처	02-2100-2892	02-3145-7208